

이재명 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약속 실손 등 보험제도 개혁 관건

보험업계, 간병비 급여화 등 과제 제시
비급여 누수로 실손보험 적자 눈덩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걱정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첫 시험대는 비급여 누수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손의료보험 개혁’과 초고령 사회의 ‘간병비 부담 완화’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손보험 소비자 편의 제고와 간병비 급여화 등 두 갈래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 실손 누수 줄이기, ‘우선지급+선택특약’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 적자는 1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영양주사·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보험금의 36%를 차지하면서 ‘의료 쇼핑’ 논란이 꺼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지급제(서류 미비해도 보험사가 먼저 지급) ▲선택형 특약(비급여 적은 플랜 가입 시 할인) 등을 통해 실손보험 소비자 편의를 강조했다.

관건은 앞선 정권이 진행했던 ‘5세대 실손’ 초안(비급여 보장 축소·보험료 30~50% 인하 설계)과 어떻게 맞물릴지다. 전 정부는 지난 2024년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의료·소비자·보험업계가 비급여 관리 방안을 논의토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비급여 관리 차원의 5세대 실손 표준약관 개정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발표된 과제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간병비 급여화, ‘국가 책임 돌봄’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공약 발표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공공 보장이 넓어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다만 공공 보장이 넓어질수록 기존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장기요양(LTC)·간병보험의 ‘보장 공백’은 줄어들어 보험사가 설 자리는 좁아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 재정과 로드맵, 또 다른 과제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선지급과 선택형 특약이 맞물리면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급여가 적은 플랜으로 가입을 유도하더라도 우선지급으로 보험금이 먼저 빠져나가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실손 개편이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려면 비급여 축소 폭을 의료·보험·소비자 세 축이 어디까지 합의하느냐가 관건이다.

돌봄의 경우 간병비 급여화의 핵심은 재원 확보다. 간병비 재원 마련에는 15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간병을 개인이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안된 상태다. 또한 변수가 많아 급여화 단계·적용 범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혁신금융서비스 기대감 고조 여전업계, 먹거리 확보 나서

李 대통령, ‘오픈파이낸스 활성화’ 공약
소상공인 전문 정책금융기관 설립 구상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카드사와 캐피탈(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도 새 전기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 대한대출 지원 힘입어 연체율 ↓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대한대출 활성화를 강조했다. 별도의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문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한다는 구상도 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이 NPL(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별도로 설립하는 법인이다. 그간 금융사는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전문 대부업체를 이용했다.

카드사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올 1분기 주요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의 평균 연체율은 1.54%다. 전년 동기 대비 0.13%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론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성 확대를 꾀했지만, 연체율이 발목을 잡았다.

◆ 신용카드 활성화·혁신금융 새 활로

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한다. 자녀 1명당 5%포인트(p)씩 인상할 예정이다. 이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카드업계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만큼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부양가족에 관한 기본공제 대책도 있다. 가계생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언급했다. 카드업계가 생활필수 영역에서 혜택을 강



올해 1분기 카드사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소재 한 음식점 입구에 결제가능 신용카드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시스

화해 신규 회원 확보 전략을 내놓은 만큼 현행 경쟁 시스템이 유지될 조짐이다.

카드업계는 자금 이체 업무 수행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즉 카드사 자체 계좌 개설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포인트, 할인 혜택 등을 활용해 신용카드 회원에게 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는 결제대금 선지급서비스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캐피탈사 또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오픈파이낸스는 크게 ▲플랫폼형 ▲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플랫폼형은 업권간 문화 개방을 골자로한다. 그간 캐피탈업계는 보험대리점업무 허용을 요구해온 바 있다.

현재 캐피탈사는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업무에서 배제됐다. 자동차 할부금융을 두고 카드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새 먹거리 발굴이 요구되는 시기다. 업계에서는 자동차금융을 취급하면 캐피탈사가 가진 차량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혁신금융서비스 확산을 위해 오픈파이낸스 활성화 방안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인프라 혁신과 효과적 금융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건설업계 “종부세 중과 폐지 등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환영 성명
“건설업 회복 위한 특단의 대책 기대”

건설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사진)은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환영 성명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



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 등으로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노동·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한 건설업체가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회장은 제도개선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와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과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으로 주택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

을 보장해야 한다”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률 마련과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 비용에 대해 지급 근거를 법제화하는 등 적정 공사비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힘써 줄 것을 제안한다”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둔화 중대 영향”

소득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 복합 작용

소비 둔화의 절반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일 ‘인구구조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 소비 추세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1~2012년(3.6%)에 비해 2013~2024년의 추세 증가율(2.0%)이 연평균 1.6% 포인트(p) 낮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비의 추세적 둔화에 가계 부채, 소득 양극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인구구조변화로 2013~2024년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0.8%p 둔화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 증가율 둔화폭(연

1.6%p)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구구조변화는 중장기소득 여건과 평균 소비 성향 등 두 가지 경로로 소비 침체에 영향을 줬다. 중장기 소득 여건 측면에서는 인구수 감소와 인구 구성 변화로 인해 노동 투입이 감소했고, 그 결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면서 소비가 연 0.6%p 둔화했다.

평균 소비 성향 측면에서도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저축 증가, 고령층 중심의 연령 분포 증가로 경제 전체의 소비 성향이 낮아져 소비가 연 2.0%p 내렸다.

보고서는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발생한 소비 둔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 고용 지원 ▲청년층의 환경개선으로 인한 출산율 회복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